

소멸시효 완성 막으려 소액 변제 독촉

채무자 일부 채권 변제했을 때 채권 소멸시효 무효 된다는 점 악용 돼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빌린 1,500만 원을 갚지 못해 채무를 지고 있었다.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몰랐던 김 씨는 돈을 빌린 금융회사 직원이 작년 말 연락을 해와 얼마라도 좋으니 채무의 일부라도 갚으라고 해 50만 원을 갚았다.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2016년은 이미 5년이 지나 김 씨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억울하게도 50만 원의 돈을 갚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자격을 박탈당했다.

채권의 일부를 갚은 경우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소멸시효완성채권도 다시 시효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채무자 일부

채권에 대한 변제를 했을 때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가 부활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무를 가진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액 대출 비중이 많은 만큼 금융 공공기관 보다 금액 규모는 작지만 대상 수가 많은 만큼 많은 채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소액 대출을 빌리는 사람은 대개 가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김 씨의 사례처럼 정당하게 빚을 탕

감 받을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일부 변제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에 4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확대 방안으로 214만2,000여 명(25조7,000억원)의 채무자가 구제돼 건전한 경제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법에 명시된 대로 완성채권소각을 통해 채무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채무부존재 증명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법적으로 빚 값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으로 쉽게 표현하지만 '빚 탕감'이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금융채권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공이나 민간 금융회사 모두 관행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가량 연장해, 정당하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도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정지돼 고통을 받아왔다. /안재용 기자



리승용 농촌진흥청장, 스마트농업전문가 대상 특강

리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3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스마트농업전문가 총 1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리 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개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농업과 일자리',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2017년도 추경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

한 스마트농업전문가 60명도 참석했으며, 이들은 20대 70.2%, 30대 17.5% 등이다.

리승용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젊은 일꾼들이 미래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진흥청 역할을 이해하면서 농업분야에서 본인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 전환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9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한,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9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했다.

또한, 국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 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될 것"이라

며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해 기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절차 등 개발 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해 특별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한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익산국토청, 공공용으로 쓰지 않는 토지 공개 매각

익산국토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 소유 토지 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한다.

익산국토청은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방향이 종전의 소극적 유지·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 매각되는 토지는 총 23필지(8,336㎡, 대장가액 1억2,000만원)이다. 이번 공개매각에 참여할 희망하는 국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개입찰은 8월 중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선정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의 자동결정 방식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일정 및 입찰 유의사항은 온비드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중 2차 대상 토지를 선정해 동일 절차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국유지 공개 매각은 공공용으로는 활용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나 일반 국민들이 매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토지들을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53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89억원 규모, 총 53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김제시 금구면 소재 임야와 군산시 나

운동 소재 판매시설, 익산시 금마면 소재 공장 등이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10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

정부, 서민 '디딤돌 대출' 최대 2조원 추가

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000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급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작금적으로 뜸하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000명가량이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